

2020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세법

올해 세법 문제는 평소에 잘 보지 않는 지엽적인 부분이 출제되었다. 익숙하지 않은 내용때문에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정답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. 하지만 정답 외의 선지를 보면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도 다수있었다. 올해 시험은 예외적인 내용이 출제되었지만 그 동안의 출제경향으로 볼 때 내년 시험에도 올해와 같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.

1. ④

세액감면과 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, 세액공제 중 이월되지 않는 공제, 세액공제 중 이월되는 공제의 순서대로 적용한다.

2. ④

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자산수증이익은 익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한다.

3. ②

① 기한후신고는 확정효력이 없다.

③ 신고납부세목의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하면 확정된다.

④ 상속세 및 증여세는 정부부과세목이므로 고지서를 통해서 확정된다.

4. ①

잉여금처분에 의한 손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

5. ②

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

$$2\text{천만원} \times \frac{4\text{천만원}}{1\text{억원} - 2\text{천만원}} = 1\text{천만원}$$

6. ③

외교공관 등 소속직원인 비거주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.

7. ①

계속적공급 : 대가를 받기로 한 때 2020년 2기 귀속 5,000,000원

외상판매 : 인도일 2020년 1기 귀속

장기할부판매 : 대가를 받기로 한 때 2021년 2기 귀속

선발급 세금계산서 : 세금계산서 발급한 때 2020년 1기 귀속

8. ④

신탁재산은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하더라도 위탁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.

9. ④

① 처분행위를 하는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.

②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사해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이지 세무공무원이 직권으로 할 수 없다.

③ 소송이 진행중인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된다.

10. ④

열람할 수 있는 국세는 다음과 같다.

- ① 체납액
- ② 발급한 고지서로 납기가 도래하기 전의 국세
- ③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

11. ③

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 한다.

12. 정답없음

- ① 특수관계 아닌 자에 대한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을 현물로 제공한 경우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.
-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.
- ③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된다.
- ④ 기부금의 미지급은 인정되지 않는다.

13. ④

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해당 법인이 손해가 되는 저가양도, 고가매입 등의 거래가 되어 한다. ①~③의 거래는 거래하는 법인의 이익이 발생하는 거래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.

14. ①

- ② 환지처분이나 보류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③ 주택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.
- ④ 대주주가 아닌 자가 상장주식을 상장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은 양도소득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.

15. ③

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의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 분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 해당 단체에게 납세의무가 있다.

16. ②

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금액이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그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.

17. ②

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과 전세권·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 계약 등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.

18. ①

- ② 압류한 재산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.
- ③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.
- ④ 과태료부과처분은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.

19. ③

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사용인이나 종업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.

20. ②

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